

### “공영주차장은 안 늘리고 감시의 눈만 대폭 늘립니까”

# 불법주차 단속 급증... 시민들은 불만 폭증

## 광주 CCTV 30% 늘고 단속건수 41%나 치솟아

“뺑뺑이를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하는데 새벽부터 주차단속을 하니 많이 힘들습니다. 혼잡도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단속 당할까봐 밥도 편하게 못 먹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차 단속하면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공영주차장은 짓지 않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불법 주차 단속이 강화되고 단속건수도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단속 카메라(CCTV)도 늘어나는 등 주차 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무료(또는 저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면적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 흐름과 관계없는 도로까지 마구잡이로 ‘뺑뺑이를 뚫는다’면서 질서 확보가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어린이집 앞 등 교통약자들이 오가는 길목에서의 단속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31만1513건이던 불법 주차 단속건수는 지난 11월 현재 44만9599건으로 무려 41.5%인 12만9446건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만9957→4만4831건(124.6%), 서구 10만4469→18만2682건(72.5%), 남구 1만9059→4만6510건(144%), 북구 6만5333→7만7153건(18.1%), 광산구 10만2695→8만9197건으로,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만건씩 단속건수가 치솟았다.

반면, 시민들이 무료 또는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노외) 면적은 제

리 결함이다. 지난해 광주 시내에는 공용주차장 면적이 1만5608면(165개소)이었는데 올해는 1만5662면(170개소)으로, 한 해 동안 늘어난 면적은 고작 54면이 전부다. 그나마 서구의 경우 공용주차장이 22개소(3779면)로 면적에 변화가 없고, 남구는 기존에 있던 공용주차장 2곳을 공원으로 만들면서 차량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5개 자치구가 주차 단속용 카메라(CCTV)마저 경쟁하듯 추가로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과태료를 170억 원가량 거둬들이고 놓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단속을 위한 장비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주차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는 지난해 112개였던 것이 불과 1

년 사이 34대가 새로 설치돼 146대로 늘어났으며, 운행 중 불법 주차 차량을 찍는 카메라가 달린 시내버스도 18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곳길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도심 상권을 위주로 한 단속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학부모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교통 흐름과 관계없이 마구잡이 식 단속을 펼친다는 주민 민원과 교통 약자들이 오가는 길목의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양측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도심 땅값은 치솟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공용주차장을 늘리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원자력공단 “방폐물 운반선 입학 강행”

## 어민들 반발... 영광 앞바다 긴장감 고조

영광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수송과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어민들과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입항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광 앞바다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단 측은 방사성 폐기물 수송이 국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입학 저지를 위해 설치해둔 그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공단 측이 어구를 훼손하고 입학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영광군 수협대책위와 영광군 자방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운반 일정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이날 운반선인 청정누리호가 한빛원전 선착장에 입항해 11일부터 일주일 간 폐기물을 선적한다. 이후 물때를 기다렸다가 늦어도 18일에는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1000ℓ 들이)을 싣고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경주로 출항한

다는 계획이다. 공단 측은 폐기물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해경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또 어민들에게 조속히 한빛원전 선착장과 통하는 항로에 설치한 그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수협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어민들은 입학 저지를 고수하고 있다. 어민들은 “일부 어촌계장과 보수합의는 ‘밀실 꼼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빛원전 접근로에서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통해 보릿고개하겠다”고 맞섰다.

공단 측은 “보상의 주체가 되는 600여 명의 선주 가운데 100명 이상과 합의를 마쳤고, 나머지 어민과의 보상합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도 공문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입학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포화상태에 달한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선적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영광 앞바다로 온 청정누리호(2600t)는 진도 가시도 해역에 피항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훈기자 jylee@

### ‘캠코’ 투자법인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사업 실질 주체는 광주시” 판단

국제사가 논란 끝에 무산된 광주시 한미합작투자사업(일명 캠코 사업)의 투자법인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투터법인(GCIC) 대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로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사업자 측에 광주시 내부 정보를 건네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자문위원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500만 원을, 같은 자문위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국 측 사업자에게 설계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달러의 고액을 송금하고, 70만달러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그러나 “캠코 사업의 실질 주체는 광주시이고, 사업 결정의 최종 주체는 김준태 전 광주시장으로 보인다. 김씨가 지지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사업 추진을 재촉하는 분위기가 아닌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 전 시장이 사업 추진의 주체였지만, 사업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김씨를 질책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 전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강 전 시장은 업무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했으며 지난 9월 시민단체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멸치장수에 행패 만취 60대, 파출소서 경찰에게도 행패

○...멸치장수에게서 물건을 빼앗다시피 하다가 파출소로 끌려간 6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도 마구잡이로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될 처지.

○-10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장성군 남면 진 남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향해 공사현장용 안전모를 휘두르고 먹살을 잡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날 동네를 찾은 멸치장수에게서 멸치 10만원어치를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되려 고함을 지르다가 누군가에게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눈가렸는데, 경찰에서 그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누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어서 대라”고 말썽을 부리다가 술이 깬 뒤 돌연 선처를 호소.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조계사에 25일째 은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하기 위해 조계사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상균 24일만에 경찰 자진 출두

### 전남경찰, 민중대회 방화 기도 50대 구속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서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자신이 그간 머물던 조계사 관음전에 나왔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구름다리를 거쳐 대웅전에 들어가 절을 올린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자승 스님 면담을 마치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알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이라며 경찰 출두 전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은 도법 스님과 함께 일주문을 거쳐 조계사 밖으로 나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바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올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을 피해 왔다. 그러

다 1차 총궐기 집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를 뒤인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지난달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헌전자동차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로 고모(53)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전국민투쟁시노조 소속으로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청 앞 교차로에서 경찰관 23명이 탑승한 차버스에 다른 참가자들과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를 차량 유리창을 깨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주유구를 부수고 줄을 집어넣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 강간범죄 발생 빈도

## 광주 전국서 두번째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강간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10일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광주시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범죄 발생건수(2011~2013년)는 63.5건으로 전국에서 서울(64.3건)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 경기 부천시(58.9건), 경기 수원시(56.2건), 제주도(55.1건)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10만 명당 강간 발생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24.3건에 불과했다.

경기 용인시(25.7건), 경북 포항시(28.7건), 전북 정읍시(29.6건), 경남 양산시(29.8건)도 강간 범죄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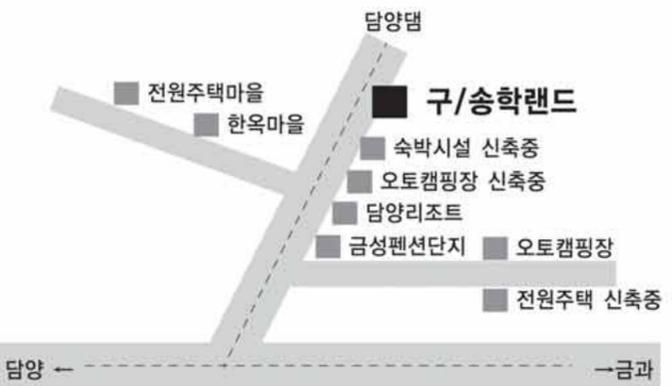
전국 주요 도시의 살인사건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1~2013년에는 총남 논산시가 인구 10만 명당 5.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1위에 올랐다. 충남 서산시(4.3건), 충북 충주시(3.7건)가 뒤를 이었다.

경기 광명시(0.8건), 구리시(0.9건), 군포시(0.9건)는 살인사건 발생 빈도가 낮았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